

# ‘야권 대통합’ 갈길 멀고 시간 없고

통합 정당 연내 출범 추진…통합 全大·지도부 구성·새 당명 안개속

민주당이 ‘야권 대통합’을 통한 민주진보 통합 정당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진보정당 간의 통합에 방점을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를 고수하고 있어 갈 길은 멀다.

이에 따라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와 방법, 지도부 구성, 새로운 당명 부여 여부 등은 아직까지 안개속이다.

◇‘야권 대통합’ 로드맵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시한 야권 대통합 로드맵은 ▲이달 내, 당내 민주진보통합 추진위(통주위) ▲11월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추진기구 결성 ▲12월 18일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연내 민주진보통합정당 출범 등이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통합에 참여하는 야권의 모든 세력이 모이는 대표자 연선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원칙과 범위, 추진 일정을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로드맵대로 야권 대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박지원, 김부겸 의원 등 당내의 당권주자들은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이후, 통합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 통합 논의를 독점하려 한다며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통주위 구성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야권 대통합 정당 로드맵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與 ‘쇄신 갈등’ 고조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여권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혁신파의 쇄신 요구와 지도부 쇄신 안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세력 간 전방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등 혁신파 의원 3명은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대통령의 5대 쇄신’을 공식 촉구하고 있다. 이 쇄신안에 서명한 의원은 남경필, 윤희룡, 임해규, 정두언 등 모두 25명이다.

이 같은 쇄신 요구에 대해 친이계·장제원 의원은 “육박자리듯 공개 연

통합전당대회와 지도부 구성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진보 정당 간의 통합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야권대통합은 ‘개문발차’(開門發車·차 문을 열고 출발)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혁신파 통합 등 시민사회 세력이 먼저 통합 작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정파는 추후 합류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통합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관심사다. 혁신파 통합 등 시민사회 세력이 당원 등 정당적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정당과

통합이 되지 않는 통합 전당대회는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라며 “혁신파 통합 등 시민사회 세력을 끌어안는 와 연락과 형식이 될 것이며 지도부 구성 배려 등은 사실상의 지분 배분으로 구성을 정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오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실시해 지도부를 선출하고 오후에 통합 전대를 실시,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제 도입과 지도부 구성에서 시민사회 세력 배려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명’ 유지하나= 우선 ‘개문발차’식 통합이 우선될 경우,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명은 기존의 민주당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 정당적 실체가 없는 시민사회 세력 등 일부 범야권 세력과의 통합을 하면서 당명까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정파 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통합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당명은 유지되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도 하나의 정파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야권 통합 추진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민주당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혁신파 의원이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대통령의 5대 쇄신’을 공식 촉구하고 있다. 이 쇄신안에 서명한 의원은 남경필, 윤희룡, 임해규, 정두언 등 모두 25명이다.

/연합뉴스

## 혁신파 의원들 “대통령 사과” 연판장

### 중앙당사 폐지 지도부 쇄신안도 논란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여권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혁신파의 쇄신 요구와 지도부 쇄신 안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세력 간 전방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등 혁신파 의원 3명은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 등을 중심으로 한 ‘쇄신 연관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쇄신 요구에 대해 친이계·장제원 의원은 “육박자리듯 공개 연

관장을 돌리는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

나. 자기희생이 없는 혁신 연관장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연관 장 내용을 보고받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당

지도부의 쇄신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고 있다. 흥준표 대표는 지난 5일 “중

앙당사 폐지 얘기는 국민이 아

무런 관심이 없고, 비례대표를 ‘나가

수’식으로 국민 참여 경선하는 것은

好事”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 증축된다. 민주당 이용섭·강기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북부경찰서 내년도 증축 예산 3억9000만원이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서 후문 공터에 지상 2층 연 면적 265㎡ 규모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청사는 기준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민원인 대기실이나 휴게실 조차 없어 불편이 커고, 별도의 문구로 고지 없어 수사서류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강기정 의원은 “북부경찰서 증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도 북부경찰서 증축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출마 기초단체장 발빠른 움직임

황주홍 강진군수 14일 출마 선언

서삼석 무안군수 19일 출판기념회

노관규 순천시장 선언 시점 고민

12월 14일 이전 사퇴… 단체장 선거도 잇따를 듯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전남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출마 뜻을 확실히 밝힌 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와 서삼석 무안군수 2명. 여기에 노관규 순천시장이 출마를 심각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선 이상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에서의 조직력과 인지도, 지도력 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절대 뛰어 넘지 않는 평가가 자비적이다. 3선인 황주홍 강진군수는 오는 14일 내년 총선 출마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설상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유선호 의원과 대결이 불만하게 됐다.

3선인 서삼석 무안군수는 오는 19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무안·신안 출마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이원석 의원과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선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주변으로부터 출마를 권유받고 있어 고민에 고민에 거듭하고 있다.

노 시장은 지지도와 인지도 면에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시장은 “호남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며 “당장은 정치 행보를 하기 어렵게 해야 순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고 고민 중이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각광적으로 수렴한 뒤 결정은 과단성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 단체장은 오는 12월 14일 이전에 사퇴할 예정이어서 총선과 함께 단체장 선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군수 직 상임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서기동 구례군수의 상급심 재판일정과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전남에서 내년 총선과 함께 자치단체장 선거가 3~4곳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시장과 군수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종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정가 라운지

### 이용섭, 북부서 내년 증축 예산 확보

광주 북부경찰서 청사가 내년에 증축된다. 민주당 이용섭·강기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북부경찰서 내년도 증축 예산 3억9000만원이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서 후문 공터에 지상 2층 연 면적 265㎡ 규모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청사는 기준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민원인 대기실이나 휴게실 조차 없어 불편이 커고, 별도의 문구로 고지 없어 수사서류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강기정 의원은 “북부경찰서 증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도 북부경찰서 증축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기정, 5일 출판기념회 성황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지난 5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국회 북부경찰서 내년도 증축 예산 3억9000만원이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서 후문 공터에 지상 2층 연 면적 265㎡ 규모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청사는 기준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민원인 대기실이나 휴게실 조차 없어 불편이 커고, 별도의 문구로 고지 없어 수사서류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강기정 의원은 “북부경찰서 증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도 북부경찰서 증축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 원룸·상가·고시원

####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최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향시 건축토지구함

#### (주)대신종합건설

☎ 010-6670-9800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 김정기2호 6천만 원 최저가 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일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 김정기 4억8천만 원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 김정기 4억8천만 원 최저가 2억9천만

### 단독주택

- 평창군 운동동 2층상가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 김정기 2억4천만 원 최저가 1억7천